

서귀포시노인복지관 관장 해임 놓고 ‘시끌’

A법인, 복지관 수탁기관 선정된 후 현재 관장 해임 통지 관장 “수탁기관 심사서 시설장 내정자로 제안 발표” 반발 직원은 서귀포시에 해고 철회·위탁계약 재검토 의견 내

서귀포시노인복지관을 운영 중인 A사단법인이 서귀포시의 복지관 운영 수탁기관 공모에서 현재의 B 관장(시설장)을 시설장 내정자로 해 다시 수탁기관에 선정된 후 돌연 B관장에게 해임(위임계약만료)을 통지해 관장과 직원들이 반발하고 있다.

2일 서귀포시와 서귀포시노인복지관에 따르면 A법인은 10월 27일 복지관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에서 5년(2026년 1월~2030년 12월) 간 복지관 운영 수탁기관으로 선정됐다. A법인은 복지관이 개관한 2016년부터 현재까지 계속 복지관 운영을 맡고 있다.

A법인은 복지관 수탁기관 신청

때 사업 제안서에 시설장을 B관장으로 명시했다. 또 대표, 수석이사와 함께 선정 심사에 참여한 B관장은 제안 설명도 직접 했다.

하지만 A법인은 수탁기관 선정 후 약 한 달 뒤인 11월 26일 임시이사회를 열고 B관장의 위임계약 만료를 결정, 28일 관장에게 통지했다.

B관장은 “복지관 운영 수탁기관이 변경됐다면 관장은 고용승계 대상은 아니다. 하지만 A법인은 수탁기관 심사 당시 복지관 시설장 내정자로 나를 명시해 복지관 운영의 책임과 안정성을 약속해 놓고, 어떠한 사전 설명이나 동의절차 없이 12월 31일자 해임을 일방 통보했

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화로 법인 대표에게 해임 사유를 물었더니 심사 때 수탁기관 응모에 참여한 다른 법인에서 선정되면 현재 관장과 직원을 모두 고용승계하겠다고 한 것을 문제삼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기자는 A법인의 입장장을 듣기 위해 2일 사무실로 여러 차례 전화하고, 관계자에게 휴대전화번호를 남기며 대표의 입장장을 밝혀달라고 했지만 오후 6시 30분까지 아무런 답변도 듣지 못했다. A법인이 지난달 28일 B관장에게 문서로 보낸 위임계약만료 확정 통지에는 “이사회에서 논의 결과 관장의 현 위임계약을 계약기간(2025년 12월 31일) 만료로 종료하기로 결의했다”고 적었다.

복지관 근무 직원들은 B관장 해임에 반발하며 지난 1일 서귀포시에 직원 일동의 서명부와 의견서를 냈다. 의견서에는 “B관장에 대한

일방적인 해임 통보는 복지관의 운영 안정성과 이용 어르신에 대한 책임, 복지관의 신뢰를 훼손하는 명백한 갑질로 판단한다”고 했다. 또 B관장 해고 통보 즉각 철회, A법인과의 위탁계약 재검토(계약해지 포함), 직원·이용자·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투명하고 책임있는 복지관 운영체계 마련을 의견서에 담았다.

복지관을 관리감독하는 서귀포시는 “A법인과 수탁기관 협약서 체결을 준비 중인 상황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며 “2일 A법인에 관장 해임 사유를 문서로 보내달라고 요청했고, 사회복지사업법 등 관련 법령과 규정 검토, 노무사·변호사 자문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서귀포시는 올해 서귀포시노인복지관에 운영비·인건비 등으로 10억 1200만원을 투입하고 있다.

문미숙기자 ms@ihalla.com

도, 디지털·관계성 범죄 예방·대응체계 강화 추진

제주특별자치도는 급증하는 디지털 성범죄와 스트킹·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를 예방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제주도는 ‘디지털·관계기반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강화 방안’을 수립하고 지역 내 대응체계를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제주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예방 강화, 피해자 통합지원체계 구축, 도민 인식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관광객이 많이 찾는 제주 특성을 고려해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디지털 성범죄 예방에 나선다. 공중화장실·학교·축제장에 대한 불법촬영 특별 점검을 실시하고, 숙박업소·음식점 등 민간시설의 자율참여를 독려하며, 피해자지원센터 인력을 확충하고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상담·주거·치료회복 전 과정을 연결하는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해 스트킹·교제폭력 피해자에 대



다시 기온 ‘뚝’ 강한 바람에 체감기온이 뚝 떨어진 2일 제주시 한림읍 협재해수욕장을 찾은 관광객들이 두꺼운 옷을 입고 있다. 강희만기자

한 보호를 강화한다.

경찰과 상담기관이 함께 피해자를 모니터링하고, 경찰과 1366상담원이 공동으로 현장출동하는 핫라인 시스템도 지속 운영해 반복 신고나 지속적 위험 상황에서 신속하고 실질적인 보호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신속하고 실질적인 보호를 위해 경찰과 상담기관이 함께 피해자를 모니터링하고, 경찰과 1366상담원이 공동으로 현장출동하는 핫라인 시스템도 지속 운영한다.

공공조직 내부의 성희롱·성폭력 대응체계도 정비된다.

부서별 찾아가는 폭력예방 특별 교육을 실시하고 고종상상담원과 고종심의위원회의 전문역량을 강화한다. 이를 통해 공공조직 전반의 예방·대응 역량을 높이고 안전한 공직 환경을 조성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오소범기자 sobom@ihalla.com

만감류 매달기는 다인굴고리!



매달기작업 일손을 줄이고 싶으신 분!

더울 때 작업을 줄이고 싶으신 분!

한번 매달면 몇 년이 속편한,
다인‘굴고리’가 있습니다!

굴고리의 장점

- 실제 매달기 작업의 시간이 줄어듬→2년 안에 인건비 절감액으로 자체구입비 회수가능
- 굴고리 작업세트로 한 번만 던져 설치하면, 3년 이상 철거 없이 매달기 고리로 계속 활용 가능.
- 굴고리 작업세트는 언제든 미리 설치 가능. 즉, 더워지기 전, 덜 바쁠 때, 인력 쉽게 구할 수 있을 때 언제든 미리 작업해 둘 수 있음.
- 고정판을 이용하여 높이조절이 쉬움.
- 수확 후 회수도 간편.

굴고리+고정판+안파밴드를 세트로 구입해 사용합니다. 나무 1개에 4-6세트 사용됩니다.
굴고리에 밴드끈의 한쪽을 묶고, 반대쪽에 고정판을 묶은 후 설치해 매달기 고리로 활용합니다.

DA IN 다인산업(주)

054-652-3725
www.dainfine.com

제주 각 지역 농협에 절찬 판매중

JM 그룹 제이엠신용정보

빌려주고 못받은돈, 외상대금 등을
돌려받는 일은 제이엠에 맡겨주세요!!

‘한국씨티은행’ 자회사인 ‘씨티크레딧서비스’의 새이름

- 업계 최상 신용조회, 부동산조회 서비스
- 경력이 풍부한 축심직원의 신속한 회수
- 전국 40개 지점망을 연계한 최고의 회수율
- 2022년 신용정보 소비자 만족부문 대상 수상

대상
채권

상사채권 : 물품대금, 공사대금, 용역대금, 외상대금, 투자금 등
민사채권 : 판결문, 공정증서 등 받고 미해결된 개인간의 대여금
금융채권 : 금융기관 여신 및 카드대금 등
채권매입상담 : 금융채권 매도 상담(매입제휴처 연계)

제이엠신용정보 제주지사
무료상담 ☎ 064)702-0500

* 직원모집 : 영업전문직, 추심전문직을 상시 모집합니다.

신용정보
소비자 만족 부문
2022년 대한민국 명품 브랜드 大賞



오영훈 도지사가 2일 제주평화인권현장 제정 반대 단체와 면담하고 있다. 제주도 제공

“제주평화인권현장, 4·3 왜곡 막는 길”

현장 찬성단체, 제정 촉구

4·3단체 등 제주 시민사회단체가 민선8기 오영훈 도정의 핵심 공약인 ‘제주평화인권현장’이 “4·3의 진실을 왜곡과 편웨로부터 지켜내는 방해”라며 현장 선포를 촉구하고 나섰다.

51개 단체로 구성된 제주4·3기념 사업위원회(이하 기념사업위)는 2일 성명을 내고 “오영훈 도정은 부디 평화와 인권을 향한 대장정의 길은 멈추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기념사업위는 “평화로워야 할 이 땅 제주에서 소수자를 차별하고, 4·3을 편웨하는 움직임은 멈추지 않고 있다”며 “제주평화인권현장을 향해 던져진 혐오와 배제의 언어는 4·3의 진실을 부정하고, 인간의 존엄을 거부하는 칼날”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주4·3의 희생은 차별과 혐오가 낳은 비극이었고, 다시는 반복되지 않아야 할 역사의 교훈”이라며 제주도정을 향해 제주 평화인권현장 제정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 평화인권현장 제정과 관련해 도청 소통회의실에서 반대 단체들과 면담을 가졌다. 반대 단체들은 이 자리에서 ‘현장 폐기’와 ‘원점 재검토’를 요구했다.

양유리기자 glassy@ihalla.com

“가정·교육·청소년에 영향… 재검토를”

현장 반대단체, 오 지사 면담

제주평화인권현장의 공식 선포를 앞둔 가운데 반대 단체들이 오영훈 제주도지사를 만나 ‘현장 폐기’와 ‘원점 재검토’를 요구했다.

제주도는 제주평화인권현장 제정과 관련해 도청 회의실에서 반대 단체들과 면담을 가졌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면담은 현장 제정에 관한 우려를 전달하고 싶다는 단체의 요청에 따라 이뤄졌으며 제주도민연대 이향 대표와 제주거북한방파제 이정일 대표 등 관계자 8명이 참석했다.

지난해부터 수개월째 도청 앞에서 시위를 이어온 단체들은 현장 일부 조항이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어 기정과 교육 현장, 청소년 보호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도민들이 현장 내용을 충분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추진돼 사회적 갈등이 확산될 수 있다는 점을 거론하며 현장을 폐기하거나 재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부 참석자들은 오 지사를 향해 “제주의 이완용이 되지 말라”, “죽음을 각오한다” 등 강경한 발언을 쏟아냈다.

이에 대해 오영훈 지사는 “현장 제정은 4·3 당시 도민이 희생된 아픈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데서 출발했다”며 “걱정과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며, 행정이 할 수 있는 부분을 다시 살피고 갈등과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을 신중하게 숙고하겠다”고 말했다. 오소범기자